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 SOC투자 확대”




건설관련단체는 지난 8월 12일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첫째 줄 왼쪽 세번째 : 정해돈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를 비롯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는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 및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 종사 중소 자영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천만 건설관련 종사자 및 가족 일동’으로 발표된 이날 호소문은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 구체화 △SOC 투자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관련단체의 이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국내 건설수주규모 감소에 따른 일자리 및 업체 감소 등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국회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건설시장이 더욱 더 침체의 수렁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해돈 회장은 이날 호소문 발표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와 SOC투자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지역경제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퇴보하지 않으려면 건설·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 우리 건설산업은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 장기화로 시장규모가 10년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니다. 이는 SOC 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005년부터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 각종 규제와 주택거래 절벽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2조원과 연평균 GDP성장률 0.3%p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단일업종 중 최고인 8~9%수준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기업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근로자 및 서민들의 생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명씩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 산업연관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연관산업과 서민가계는 붕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개업소는 16,5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연관업종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국회는 건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금번 정기국회 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하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산업 종사자와 부동산중개·이사·인테리어·가구 등 중소 자영업자 및 건설 근로자의 간절한 의지와 열망을 담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1,000만 건설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가족 일동

“현 경제상황 고려, 신중한 판단” 촉구




중소기업계는 지난 8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왼쪽 두 번째 : 정해돈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8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장 중소기업과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

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중소기업 성장엔진 멈추게 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경영난 악화, 고용 불안 및 고용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노사는 오랫동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 지침을 기반으로 상호 충실한 협상과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노측의 기획소송 불길이 중소기업으로까지 번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4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1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달하는 금액으로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입니다. 또한 매년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돼 중소기업들의 성장엔진이 멈춰 설 것입니다.

이미 중소기업 네 곳 중 세 곳은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며, 향후 경기전망 역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9.4%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며, 93.7%는 신규채용

중단, 생산손실 및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은 인건비 증가분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자사의 인건비 상승부담과 더불어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이종고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내몰릴 것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법부 판단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임에도 의도하지 않게 이를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외국과 달리 폭넓게 해석하여 노사혼란과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된 현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은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만을 할증임금의 기초로 한정해, 우리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습니다.

사법당국은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통상임금 관련 분쟁과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앞장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 일동

유공회원 포상 대상자 추천 심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제68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우광현)는 지난 8월 28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8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우광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여름은 무덥고 비도 많이 오는 힘든 날이었는데, 우리 설비업계도 날씨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시고 회원사 간 친목을 강화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49차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심의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정 제·개정 협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9월 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9월 3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규정 제·개정(안), 제49회 임시총회 소집 등 협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팀을 가동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 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분리발주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가 포함되어 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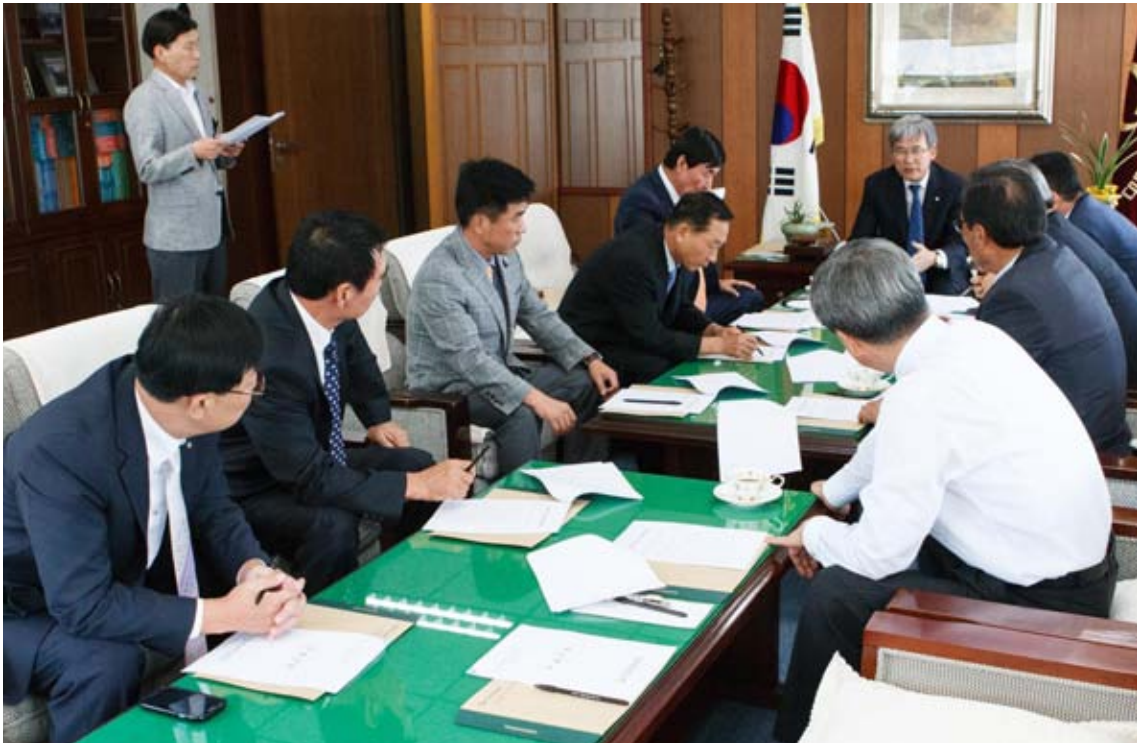
정해돈 회장은 “시·도회장님들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

깝다”면서 “우리 모두 다함께 더욱 더 분발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회장 회의에서는 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추진
-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하도급 관련 법령개정 및 해소센터 운영 추진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개최
- △각종 정책 간담회 개최
-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순회교육
- △제3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추진
-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 △제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2013년 가스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 △2013년 설비건설업 시공능력평가·공시
- △2013년 적용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 △협회 홍보활동 

인정기능사 최종합격자 심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9월 3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36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지난 9월 3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실에서 제36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1회 인정기능사 경력증발급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한국폴리텍I대학 정수캠퍼스에서 실시된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응시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심사가 이뤄졌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최종 합격한 23명의 인정기능사에게 9월 중으로 경력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분리발주 법제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총력




대한설비건설협회 TF 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8월 5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6차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이상일) 회의를 개최했다.

TF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관련 ‘새누리당 공공발주제도 선진화 T/F 회의’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방문 및 의원면담 등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TF위원회는 향후 분리발주 관련 국

회 방문 및 주계약자 관련 발주기관 방문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건의서’ 제출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총회개최 · 결산(안) · 포상자 심의 등 협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제26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8월 22일 제26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44회 임시총회 소집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대표회원 보궐 선출의 건, 유공자 포상 심의·결정의 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느낌이다”면서 “우리 업계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업무 추진실적과 9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9월 업무추진 계획

- 제44회 총회(임시) 개최 준비
-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추진
- 2013년도 회원명부 제작·배부
- 하반기 권역별 간담회 개최 


설비분야 핵심 엔지니어 육성



경기도회는 지난 8월 22일 '2013년 상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8월 22일 경기도 회 사무처에서 '2013년 상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내 설비관련 5개 대학(대림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흥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 김지희·양태천 경기도회 부회장, 민평기 본회이사, 민광기 회원감사를 비롯하여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중 건축설비과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남윤옥 건축설비소방과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서병택 건축소방설비과 교수, 대림대학교 김동우 건축설비소방과 교수 등이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각 대학 학생들에게 설비건설업계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설비분야 핵심 엔지니어로 성장하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경기도내 5개 대학(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흥대학, 두원공과대학, 용인송담대학) 건축설비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비건설업계 후진양성과 설비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장학생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김동욱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1
황은영		1
김재혁	수원과학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2
김백승		1
박준성	신흥대학교 건축설비설계과	2
강서원		2
한민형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1
공현성		1
황주환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
유준상		1

건설업계 백년대계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건의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8월 2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주환)는 지난 8월 2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초청하여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설비업체의 의견을 설명하고,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환 대구광역시회 회장을 비롯해 이한수 본회 회원감사, 설동길 동해산업설비 대표이사, 김경희 본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건설협회 박종규 대구광역시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김주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체가 설계금액의 50% 내외로 공사를 하청받다 보니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건설기술자를 비롯한 기술인력이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청년실업자는 넘쳐나지만 건설업계로 진출하는 신규인력이 없어 극심한 기술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기능공은 물론이고 기술자나 심지어 관리자까지도 외국인력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주환 회장은 또한 “향후 10년 후에는 건설기술인력난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고사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사품질향상·기술인력양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